

영재교육도 '빈익빈 부익부'

과학고·영재고 확대 정책...예산없는 광주·전남 발 동동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자율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우려됐던 지역간 재정여건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영재교육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경기 등 지자체 예산이 충분한 지역의 경우 영재 교육을 위한 과학영재학교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면, 광주·전남지역은 열악한 예산 여건에 따라 영재 교육 확대를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현재 20곳인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30곳으로 늘리고, 전체 고교생의 0.2% 수준인 3천900명의 재학생을 8천명(0.5%) 수준으로 확대하는 영재교육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영재교육 확대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주·전남지역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최근 '과학영재학교의 점진적 확대'를 골자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따라 서울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만 설립·운영 중인 과학영재학교가 오는 2012년까지 총 4곳으로 확대·설립된다.

서울과학고에서 전환, 2009년 3월 개교하게 될 서울과학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전국 단위의 모집도 가능해진다.

이런 과학영재학교 지정은 광주과학고를 비롯한 전국 20개 과학고를 대상으로 공모했으며, 과학영재학교로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인정

된 서울과학고가 최종 선정됐다. 교과부는 올해 내 공모를 통해 1~2개의 학교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광주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수가 없어 발산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의 과학영재학교 확대 운영 정책이 시·도교육청 또는 지자체 자율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서울과학영재학교 역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신청했다 공모에서 제외된 경위와 대전

은 당장 재공모에 다시 나설 것이지만 우리로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교사 증원에서 시설까지 학교를 새로 하나 세우는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선별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전체 학생 정원의 0.43% 수준인 영재교육 학생의 비율을 내년 0.54%까지 늘리는 등 영재교육에 힘을 쓸 계획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영재교육은 초·중등 학생이 주를 이루는 영재교육원이나 교내 영재학급을 대상으로 한다.

결국 초·중등 수준의 과학·수학 영재들이 길러진다 하더라도 전국 단위의 학생 모집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과학영재학교로 진학한다면, 지역으로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첨단지구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과학고 최윤길 교감은 "우리도 과학영재학교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기반을 조성 중인데 문제가 있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추진할 것인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1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와 구 묘역 간 오솔길에 시(詩) 비석들이 설치돼 참배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길이 136m의 이 오솔길에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매일 신문기자들의 글과 문병만 시의 '다시 타오르는 5월' 등이 쓰인 비석(지름 50cm, 높이 40cm~1m) 20개가 설치돼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민족민주열사 유가족 5·18 행사 첫 참석

'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 탄력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민족민주열사 유가족들이 올해 처음으로 5월 행사에 참석해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민족민주열사 추모연대' 유가족 10명은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월 정신승 국민대회'에 참가했다. 민족열사 유가족들이 5월 기념행사에 대거 공식 참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카네이션 선물을 받은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88)씨는 "이 카네이션은 빨강·노랑 꽃이

하나로 합해진 5월 열사들의 피"라며 "5월 정신과 민족민주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자"고 말했다.

민족열사 유가족은 그동안 국립 5·18 민주묘지 내 민족열사 안장문제를 놓고 5월 관련 단체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두 단체는 최

근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공통된 견해를 내놓는 등 상생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올 연말까지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인근 부지에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정부에 건의 중이다. 이같은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 일부 민족열사 유가족들이 지역적 편향성을 들어 반대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시 중구 남영동에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5·18 묘지 역대 대통령 방명록 들여다 보니

이명박 대선 후보때 '경제 살리기' 부각 노무현 퇴임 이후 '강물처럼' 남겨 눈길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 다녀간 역대 대통령들과 주요 정치인들은 방명록에 어떤 글을 남겼을까.

18일 오전 5·18 민주항쟁 28주년 기념식에 참여한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 네차례 이곳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을 제외한 세 차례 방명록에 글을 썼는데 17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과 후의 내용이 달라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인 지난해 5월 13일 묘지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참배 후 '5·18 민주화운동이 미래 대한민국의 화합과 번영의 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는 글을 남겼다. 후보로 확정된 뒤 선거운동이 한창인 지난해 10월 22일 방문에서는 자신의 주요 공약인 경제 살리기와 관련, '반드시 경제 살리고, 사회통합 이루어 님들의 송고한 희생정

신을 살려서, 크게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썼다.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5차례의 기념식에 모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지난 4월 20일 방문을 통해 방명록에 처음 글을 남겼다. 노 전 대통령은 '강물처럼, 16대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짧막하게 썼다.

5·18의 배후조정자로 몰려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지난 2006년 6월 16일 5·18묘지를 방문, '민주주의는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5.18 특별법 제정과 5·18 묘지 조성의 주인공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작 5월 단체의 초청으로 지난해 5월 22일묘지에 묘지를 처음 방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진실, 자유, 정의'를 한자로 남겼다. /김필상기자 kps@kwangju.co.kr

나원침 (7510) 김중두



다 좋은 건국 선명지대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중국인 비하 발언' 이나운서 사과

○대학 축제에 초청됐던 한 방송사 J 이나운서가 중국인을 비하하는 투의 발언을 했다

가 중국 유학생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 ○19일 연세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아카라카 축제'에 초청된 J씨가 무대에서 대화를 하던 중 "중국인 고대생의 공통점은 '구리다'는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것.

○당시 축제현장에 있었던 한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에 "유학은 중국인 친구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실망할지 낫 뜨거웠다"고 게재하는 등 다른 많은 학생들도 댓글을 달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비난.

○J씨는 이날 곧 바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여러분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타지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 여러분께 큰 상처를 남겼다. 매우 송구스럽고 부끄럽다"고 게재. /연합뉴스

광주 복지법인 인·허가 수사 확대

광주 N복지법인 허가과정에서 대한로 비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사회복지법인 인·허가가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복지법인 인·허가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9일 "N복지법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광주시의 다른 복지법인 허가과정도 개설행위 과정에도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주지역 사회복지법인 인·허가가 2005년 3개소, 2006년 4개소에서 지난해 11개소로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의 원들에 의한 부당한 압력이나 공무원 로비 의혹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특히 광주시의회 S의원의 친인척 명의로 허가가 난 N복지법인의 경우 인근에 시 보조금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려 했다가 특혜시비가 일자 사업이 유보되는 등 잡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

경찰은 또 장남 명의로 복지법인 허가를 받은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의회 K의원을 이날 소환해 공무원들에 대해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은 K의원이 금품 로비 의혹은 가능성이 작음으로 보고 허가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직무와 관련된 과도한 접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9 총선 금품 의혹

광주 당선자 소환 조사

지난 4·9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4·9 총선과 관련, 광주·전남지역에서 당선자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광주지검은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 K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금품제공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K당선자에 대해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내용이 맞는지 추궁했으나 K당선자는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미켈 왕국

행해민의 꿈

신가본점 959-5060 매곡점 576-8833

미켈 왕국

행해민의 꿈

신가본점 959-5060 매곡점 576-8833

상록스 크린 골프 대회

메카패스 배

상록스 크린 골프 대회

메카패스 배

상록스 크린 골프 대회

메카패스 배